

## [ 오피니언 ]

## 다산포럼

송재소



최근 '동물복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EU측이 통상조건 가운데 하나로 동물복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역대상이 되는 식용 동물의 권리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동물복지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뇌지능기의 폐지 사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번식용 어미 폐지는 '스톨'이라고 불리는 폭 60cm, 길이 200cm의 금속 틀에서 산다. 생활 한쪽 벽만 보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할 수 있다. 생후 230~240일쯤 부터 '교배당하기' 시작해 114일 임신하고서 새끼를 낳고 다시 교배 당한다. 새끼 폐지는 생후 10여 일쯤 지나면 송곳니와 꼬리가 잘려나간다. 마취는 하지 않는다. 폐지 10마리 중 3마리가 질병으로 숨을 거둔다.(조선일보 2007년 12월 11일)

아무리 동물이지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움직일 수 없는 삶은 공간에서 '알 날은 기계'로 살다가 폐계(廢棄)가 되어 통학길

## '동물의 5대 자유'

으로 팔려가는 닭들의 슬픈 운명도 폐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동물 권리 보호운동이 일어났다. 예컨대 닭 한 마리 당 닭장의 넓이를 늘리고 도축 48시간 전에는 닭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가, 도축장 안에서 가죽을 옮길 때 가죽이 견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 등이다.

그 중에서 1876년 세계 최초로 '동물학 대방지법'을 제정한 영국의 농장동물 복지위원회가 1996년에 제정한 '동물의 5대

자유'가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5대 자유란 ▲갈증, 배고픔,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이다.

고통 받으면서 사육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이 '동물의 5대 자유'가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어쩐지 개운하지 못하다는 느낌 또한 떨쳐버릴 수 없다. 이 정도의 자유라면 인간에게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

또 때로는 텔과 가죽으로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가죽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용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학대해도 좋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죽을 학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도 엄연한 생명체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이나 가죽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과 가죽을 놓고 볼 때 인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국의 한 동물보호 단체가 어느 종합병원에 보낸 편지에서, 그 병원이 훈련을 실현으로 계속 사용하면 병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동물 사랑이 지극한 나머지 동물을 인간보다 더 우선시한 경우이다.

EU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수입된 닭을 기를 먹으면서 '이 닭은 어떻게 길러졌을까? 이 닭이 도축되기 48시간 전에 학대 받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10억 이상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먼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인구의 6분의 1인 10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10억 명의 극빈층이 과연 이러한 '5대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아니 '5대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인구는 10억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인간과 가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족이란, 원래 야생에서 살던 것을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길들여 기르는 동물이다. 때로는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식량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 시설

## 동·서·남해안 특별법 거부권 행사 안된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가 그 이유다. 지방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 법 제정까지 이어진 최초의 사례로 꼽히는 특별법이 의미와 기대효과가 남다른 것이다.

물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과정에서 관련부처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것은 물론 해상국립공원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접근을 허용하는 시설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될 경우는 사업별로 규제하면 된다. 환경파괴를 이유로 법안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신중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정치권 인사들이 논공행상을 하듯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가도 줄대기에 여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니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인수위 명단에 포함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염불 수 있듯 출세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정권교체기의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 인수위를 통해 국정을 원활하게 인수 인계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선자의 첫 작품인 민족 새 정부의 인사 기준과 성격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과제인 그들의 윤곽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는 가능하면 정치인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인을 배제하면 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 실용을 중시하는 실무형 인사들로 인수위의 진영이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 제외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인재 풀이다.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당선자의 후보 시절 자문교수나 출신학교, 서울시장 재직 때의 인맥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 참여경력이나 정치 경험에 있는 인사들이 주축을 이룰 경우, 노무현 정부의 386세대 기용에서 드러나듯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동해 조직과 마찰을 빚어서도 안 된다.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하되 비판적인 인사들도 과감히 등용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에도 비중을 두고 인선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리거나 아예 회수되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2천만~5천만 원까지 높이는 등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투자수요가 몰려,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등 이른바 'MB(이명박) 효과'가 나타나는 등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 양도세·종합부동산 세 등 세금 감면이라는 공약이 실현되며 시장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새정부가 부동산으로 또다시 재미를 보려는 투기꾼들의 구미를 맞춰줄 수도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종부세 수준 유지에 고심하고 있고 재개발, 건축면적 유통률을 상향조정하지만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끌리고 자금을 쏟아붓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벌써 들떠 있다.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 급매물이 팔

개발이익은 더 강력히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차지 투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활성화'가 아닌만큼 자신들에게 표를 던진 투기 세력을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한다.

〈기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00-521> <F A X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조사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552 <F A X 02-773-9335>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시 압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양철호



한국노인의 전화가 노인전문 전화상 담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상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부양할 사람이 없고 가난하며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시설에 보호해주는 '양로원 노인복지' 수준이어서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노인상담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낯설었던 시절이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 중의 하나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폭이 얼마나 넓으나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부분

지제도가 시행되거나 제정되어왔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노인의 전화에서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노인의 성(性)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1990년대 중반에 '노인의 성적 권리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1년 '노화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세미나', 2003년 '노인 일거리 만들기', 2004년 '실버 산업의 오늘과 내일', 2007년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노후준비와 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난한 노인만이 아닌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제

##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의 변화

의 제도가 대상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일부분에 한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복지수준을 평가할 때 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 들어와서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뀐 것을 계기로 점점 복지제도의 수급권자의 폭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진행되어 왔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저소득노인이 아닌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정,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제정 등과 같이 선별적인 노인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복

지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한 가지 사회복지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실용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세번보다는 성장을, 복지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당의 집권은 복지분야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분야의 진전을 과거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동의를 거쳐 이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우리 한국노인의 전화와 같은 NGO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복지자를 축소하려고 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정부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개척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의 전화 광주·전남 회장, 동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탈모 치료비·약값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앞 머리가 벗겨지는 등 탈모가 심한 40대 초반의 남성인데, 탈모로 인한 치료와 약값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병원 탈모 클리닉 치료를 받으면서 탈모방지제(프로페시아)를 먹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는데 들어가는 약값은 한 달에 4만원, 부담스럽다.

이 약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클리닉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

도 있고 바쁜 탈모 치료제와 삼푸도 정기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같은 비용을 감안한다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탈모로 죽지 않으니 그냥 참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30대 초반부터 시작된 탈모 증상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탈모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으면 한다.

▲김민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 국제 곡물가격 급등 주범 옥수수, 사료용으로 더 활용을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말이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등의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돼지를 기르는 사료의 원가 상승을 가져온다.

사료값이 오르니 고기값도 오르는 것. 결국 도시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게 되는 셈이다.

사료가격 인상 만큼 고기값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료값을 견디지 못한 축산농민들은 폐업하게